

與 호남·조선 의원들 “전두환 찬양 망언 尹, 즉각 사퇴”

“호남이 전두환 정치 잘했다 한다? 경악스러워”

“국민의힘 5·18 사과 진정성 있나?...사과하라”

“술 재판 검찰 역사인식...대선후보 자격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호남 의원들은 2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즉각 호남 폄훼와 국민을 우롱하는 망나니적 망언에 대해 사죄하고 대선후보직에서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전북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에게서 12.12 군사반란과 5.18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에게는 오직 5월 학살자의 낙인만이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그러

는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호남 의원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아직도 생존 중인 5.18 피해자와 가족들, 나아가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망언”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역사를 배운 사람이라면, 전두환의 만행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하는 반면교사로 기억하고 있으며, 또한 민주주의를 짓밟고 학살을 자행했던 헌정사상 최악의 반민주적 대통령으로 평가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권력욕에 사로잡힌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에 대한 찬양 망언은 윤 후보가 군부독재의 후예임을 자임하는 것이

며, 천박한 역사인식에 기인한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화살을 국민의힘으로 돌려 “우리는 국민의힘이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 등의 망언에 대해, 2020년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던 것을 기억한다”며 “그런데, 다시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진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로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사과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망언에 대해 공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성주, 김수흥, 김승남, 김원익, 김윤덕, 김희재, 민형배,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송갑석,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개호, 이병훈, 이음빈, 이원택, 이형석, 조오섭, 주철현,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조선 의원들도 별도의 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전북지역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 발언에 대해 대선 후보직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회견을 갖고 “2000명을 훌쩍 넘는 시민이 41년 전 광주에서 스러져갔다. 그 현장에서 토해낸 피와 울분은 대민 민주주의를 위한 씨앗이 됐다”며 “윤석열씨는 바로 이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씨의 철학은 그동안 정치검찰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역사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는 1995년 전두환 재판에서 검찰이 취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씨가 민주공화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검찰공화국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인지 모든 국민들이

확실히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을 덮고 싶어하고, 전두환 정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윤석열씨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며 “오늘부로 대통령 예비후보를 내놓아야 한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이재명 답변시간’ 두고 여야, 고성·설전



이재명 경지지가 20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답변시간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설전이 오가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은 초반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정감사

이재명, 대장동 의혹 관련 답변 거부 의사 국민의힘, 대장동 ‘배임’ 의혹 입증 주력

는 인사정문회가 아니다”라며 “질의하는 건 의원들의 권한이니 내가 뭐라 할 수 없겠지만 경기도정에 집중하기 위해 내 과거에 관한 일, 도지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 도지사 업무 중에서도 국가 위임사무, 보조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답을 못드려도 이해해줄길 바란다”고 대장동 의혹 관련 답변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경기도청 정책실장과 이 지사 간 통화 내역, 이메일 수·발신 기록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는 “무작위로 달라는

건 과하다”고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의 이 지사를 엄호하는 모습은 지난 18일 행안위 국정조사 노골적이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질의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 시간을 두고 한 때 고성 이 오가고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답변이 너무 길다”, “공정하게 하라”며 항의했고, 이에 민주당 측은 “질문했으면 답변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맞섰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소병철, ‘여순사건법’ 대통령령 제정 협조 의사 타진

법제처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19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강섭 법제처장에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선제적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날 미리 준비한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73년 전 오늘이 10·19 여순사건이 발발한 날”이라고 상기하면서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심정을 표했다.

소 의원은 이어 “제가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법이 73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시행 전까지 대통령령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행안부가 준비 중인 대통령령에 대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법제처가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강섭 처장은 “선제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여순사건법 통과 후 법률안 공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법안 설명을 직접 했던 인연이 생각한다”며 “73년의 한을 풀 수 있는 여순사건법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법이 통과된 후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처음 열린 ‘여순사건 제73주기 합동 위령제 및 추

념식’에 참석지 못하고 추념사 대독으로 참석을 대신했다.

여순사건법은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 차례 발의됐지만 2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답보상태였다. 소 의원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지 1년도 안 돼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시킨 바 있다.

행안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1일에 맞춰 시행령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법의 대통령령이 모법의 역사적 의미와 취지, 희생자와 유족들의 뜻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